

人文論叢

81권 4호

2024년 11월

서평

[www.kci.go.kr](http://www.kci.go.kr)



# ‘조선인’이 본 ‘남의 나라’ 전쟁

박준형\*

[서평] 조재곤(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724쪽

## 1. ‘남의 나라’ 전쟁

20세기 말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는 동서 냉전 체제의 종식을 알리며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의 도래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21세기 초두에 발생한 9.11 테러, 그로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너무나도 빨리 그 기대를 저버렸고, 사반세기를 앞둔 현재 지구촌 곳곳은 전쟁 중이거나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상시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러한 전쟁 위기는 일찍이 냉전 속 최초의 열전을 겪었고, 또 여전히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지난 10월에 있었던 전국역사학대회의 전체 주제는 ‘전쟁과 평화’였으며, 올해 4월 어느 신문 칼럼에서는 「130년 전 동학농민전쟁이 부른 역사의 소용돌이」라는 제목 아래 동학농민운동이 초래한 청일전쟁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동아시아 전체를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표했다.<sup>1</sup>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올해 초 간행된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은 130년 전의 전쟁 경험과 교훈을 제공한다. 이 책에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130년 전 동학농민전쟁이 부른 역사의 소용돌이」, 『중앙일보』 2024년 11월 13일.

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책 제목에서 ‘청일전쟁’을 수식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 곧 ‘조선인들의’이다. 저자는 청일전쟁이 “한국 영토에서 시작되었고, 당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 이 전쟁에 속박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청일전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우리는 청일전쟁을 “‘남의 나라’의 전쟁이라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2쪽). 이를 볼 때 ‘조선인들의’라는 수식어가 의도하는 것은 청일전쟁을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두 나라가 전쟁을 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조선이 이 전쟁의 또 다른 주체였음을 밝혀낸다면, 청일전쟁은 ‘조청일전쟁’으로 불릴 것이고 그때 이 전쟁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실제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야마 유키오는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조선과의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그로부터 동년 8월 20일 조일 간 「잠정합동조관」 체결 때까지를 ‘일조선전쟁’ 시기로 명명했다. 또한 하라 아키라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각각 ‘제1차 조선전쟁’, ‘제2차 조선전쟁’이라 부를 것을 주장했다(39쪽). 하라의 이 같은 명명 방식은 ‘전쟁’이 한반도였다는 점과 전쟁의 목적이 한반도 지배권 확보에 있었음을 중시한 데 기반한다.<sup>2</sup>

그런데 저자는 이와 같은 ‘조일전쟁’론을 거부한다. “청일전쟁 과정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공격으로,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종결된 경복궁 점령을 ‘또 하나의 전쟁’으로 본다면(히야마와 하라 같은 일부 논자는 일본군의 타이완 점령도 ‘일대전쟁’, ‘타이완 정복전쟁’으로 규정한다) 이후 조선 정부가 공식 관여한 조일연합군의 평양 북상 및 청국군과의 전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40쪽). 서평자가 보기에 적어도 저자와 하라

— www.kci.go.kr  
2 하라 아키라(2015), 김연옥 옮김,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pp. 14-15.

아키라의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조일전쟁'론을 거부한 것은 “조선을 ‘동등한(?)’ 주체로 설정”(40쪽)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동등한’이란 단어 옆 물음표가 말해주듯이 국가 간 관계의 비대칭성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 입장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저자는 스스로 전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타자의 눈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청일전쟁을 바라보자는 것인데(20쪽),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하나는 당대 조선인들의 시선 차원이다. 저자는 이 책 표지에 실린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전쟁의 객체 취급을 받아 온 당대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다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6쪽). 그리고 이 문제는 당대 조선인들의 문집과 일기 자료를 등을 대폭 활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21쪽).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인 연구자의 시선 차원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청일전쟁 연구는 지배정책사 내지는 수탈사·항일민족운동사 중심이었고, 청일전쟁과 조선의 유기적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한다(29쪽). 청일전쟁의 전체 상황과 과정의 종합적인 정리는 한·중·일 삼국의 원사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요구하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수행한 그러한 작업이 “처음 시도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평했다(20쪽).

이와 같이 전쟁의 주체를 자처하지 않는 저자의 태도야말로 중국과 일본 양국 간 논쟁을 “냉정하고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233쪽)에서 관망하게 하고, 또 저자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 규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를 위해 저자가 치렀을 ‘사료와의 전쟁’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렇다면 청일전쟁을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새롭게 떠오르는 역사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 2. ‘전장’에서 본 전쟁

이 책은 총 세 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별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건들이 있는데, 각 부 부제들이 말해주듯이 제1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제2부 풍도해전과 성환전투, 제3부 평양전투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일전쟁이라 하면 한반도와 중국대륙에서 전개된 모든 전쟁 상황을 포괄하지만, 이 책에서는 ‘조선인들의’ 시선으로 전쟁을 보려 했기 때문에 그 시야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다.

다만 ‘조선인들의’ 시선은 독자를 ‘전장’ 깊숙한 곳으로 이끈다. 이때 ‘전장’은 청일 양측 군대가 맞서 한바탕 전투를 치르는 격전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격전지보다 군대의 이동 경로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청일 양국 군대의 이동 경로 주변에서 이루어진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이 해당 지역 일대를 격전지와 다름없는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시종 집요하게 밝히고자 했던 사실들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동원 시스템이며 또 그것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다. 더구나 저자의 시선은 피란민들의 뒤를 쫓기도 한다. 이 점에서 저자에게 한반도는 그 전체가 하나의 ‘전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각 부 제목은 각 사건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준다. 먼저 제1부 제목인 「은폐와 진실」은 한·중·일 삼국의 원사료 비교·분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 했던 작업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리고 제2부 「야만의 전쟁과 휴머니즘」은 ‘문명’을 전쟁 명분으로 삼고 ‘문명’에 근거하여 전쟁을 수행했다고 선전하던 일본의 폭력성을, 다시 말해서 ‘야만’적 행위들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며, 제3부 「반성 없는 역사의 반복」은 전쟁의 폭력성이 지역만 바뀌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주제들은 각 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각의 비중은 부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으로는 이 세 개 문제의식이 책 전체 내용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각 부 내용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제1부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의 진실이다. 이 사건은 청일 양국의 공식적인 선전포고에 앞서 청일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자 스스로 말하길 “불과 몇 시간 만에 종결”된 이 사건을 위해 과연 이 책의 3개 부 중 1개 부를 모두 할애하는 것이 적절했을까?

저자가 수많은 사료들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출한 ‘객관적’인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 점령의 세부 계획은 일본군 참모차장의 기획 아래 참모본부 출신 군부 엘리트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둘째 일본군과 교전 상황에서 조선군의 발포는 정당방위 차원이었다. 셋째 조선군 수비병은 적극적으로 항전했다. 넷째 조선군 수비병의 해산은 ‘패주’가 아니라 국왕의 허위 ‘전교’를 믿고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다(75쪽). 이는 일본 측이 날조해 낸 역사상을 뒤집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당시 조선군은 불법적이지도, 무력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음이 부각된다.

위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아래 강제된 사건임을 확인했다면,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 반향이 비로소 시야에 들어온다. 저자는 조선 관리, 서울 주재 외국 공관, 일본군 및 언론의 기록들은 물론, 일본인 전당포 주인이나 피란 중이던 조선인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개인 기록들까지 세세히 들어가며 사건 이후 조선인들의 피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다.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어 결국에는 의병항쟁이나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로 이어지게 되었음 또한 강조한다(제1부 제2장).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청일전쟁 개시를 알린 사건을 넘어 조선인의 저항을 부른 파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따라서 “병자년 통상 이후 갑신년 10월의 변→갑오년 6월의 변→을미년 8월 ‘국모 시해’→을사년 10월의 5조약 강제 체결”이라는 국권 침탈 사건들의 계보상에 오르게 된다(111쪽).

이처럼 경복궁 점령 사건이 조선사회에서 일으킨 반향이 컸다고 한다

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룬 것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쟁이 본격화된 시기를 다룬 제2부 및 제3부에서 관련 서술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자의 진정한 의도는 전쟁 서사의 흐름과는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홍종우에 대한 언급이다. 저자는 경북궁 점령 사건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입장을 정리한 후 마지막에 홍종우가 정부 관료들을 면전에서 강하게 비판한 장면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사건 당시 군문대장이었던 장위영사 이종건과 총어사 한규설의 비접함을 질책하는 내용은 별도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문 아래에는 홍종우 그림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 “근왕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는 캡션을 달아두었다(104-107쪽).

일찍이 저자는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푸른역사, 2005)에서 홍종우를 수구파도 문명개화론자도 아닌, “대외적으로 ‘자주와 독립’, 내부적으로는 ‘공론과 공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략) 제3의 근대화”를 추구한 인물로 재평가했다.<sup>3</sup> 대다수 사람들이 홍종우를 김옥균을 암살하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정부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있을 때, 그와 결을 달리 하여 보수적 근대화를 제기했다고 할 만한 위와 같은 평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기존 통념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저자가 경북궁 점령 사건을 중시한 것은 조선인들의 저항으로부터 뿌리 깊은 ‘근왕 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 저자는 이 사건을 “가치중립적 용어인 ‘왕궁 점령’으로 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40쪽), ‘경복궁’이 아니라 ‘왕궁’이라 표기하면 일본군 점령 행위의 대상이 ‘왕’이었음이 드러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적개심의 실체 또한 분명해진다. 더욱이 이 책이 청일전쟁-대한제국-러일전쟁을 주제로 한 저자의 3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권이고(간행 순서로는 마지막), 두 번째 권인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 고종과 대한제국』(역사공간, 2020)에서 대한제

— www.kci.go.kr

3 조재곤(2005),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푸른역사, p. 260.

국의 자주적 근대화 과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복궁 점령 사건은 새롭게 독해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풍도해전과 성환전투를 다룬 제2부는 청일전쟁에 대한 이 책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전쟁 지휘부의 전략이나 열강 간의 외교전보다는 '전장'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은 이미 제1부에서부터 청일 양국 군대가 전쟁 준비를 하는 또 다른 '전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청국군은 조선정부 요청으로 출병한 만큼 영접사를 통해 물적·인적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쟁 개시 이후 전세가 기울어지자 부족한 분을 직접 징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한다(127쪽). 그에 반해 일본군은 일본정부와 군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출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 물자에 대한 현지 조달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162쪽). 요컨대 청일 양국 모두 조선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필요 자원을 강제 징발했고 그것은 해당 지역의 황폐화와 지역민들의 저항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제2부에서는 그러한 '전장'의 실상을 전황 변화와 연관지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풍도해전과 성환전투, 해전과 육전 모두 일본군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청국군의 패주가 시작되었다. 패주 중인 군대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일례로 충주목사는 청국군 지원 물자를 대비해 놓고 있었으나, 정작 청국군은 일본군이 충주 근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경로를 바꿔 신당이란 곳에서 노략질을 했다(271쪽). 더구나 새로 집권한 갑오개혁과 정부는 주한일본공사관의 압박을 배경으로 청국군에게 물자를 제공한 지방관들을 징계하고 있었다(274쪽). 이로써 청국군의 곤경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것은 다시 노략질로 이어졌다. 조선 구원을 목적으로 파병된 청국군의 횡포에 대해 한 청국인은 그 원인을 항복한 해랑적들이 포함된 청국군의 구성에서 구하기도 했다(272쪽).

군대의 횡포는 청국군의 뒤를 쫓는 일본군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일본군의 짐꾼으로 동원되는 것을 피해 조선인들이 피란을 떠나버리자 진군하

는 연로 마을은 모두 텅 빈 상태였다. 피란은 나라 밖까지 이어져 전쟁 후 웨이하이웨이의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 유랑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송환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살해 사건은 횡포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일본 측은 책임을 추궁당할 때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의 ‘몽매’를 탓했으며, 그것도 아니면 피해자들을 ‘폭도’나 ‘흉민’으로 단정지어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277-279쪽).

그러나 일본의 중군기자들이 쏟아낸 기사들은 “일본제국의 나팔수로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도식을 적용, 이웃나라를 모멸하는 배외적인 충군애국주의로 일관”하는 한편(334쪽), “일본군의 비인도적 행위와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339쪽). 그리고 청국군 기강이 무너졌음을 선전하기 위해 청국군 막사에서 수습했다는 조선인 부녀자의 상의를 전리품 전시에 이용한 것은 그 자체가 “일본이 강조한 ‘문명’이 아닌 ‘야만’의 광고 선전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고 지적한다(305쪽).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제2부 제목에 있던 ‘휴머니즘’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맺음말까지 기다려야 했다. 맺음말을 보면 ‘전장’의 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그 또한 ‘전장’이었던 인간애의 발견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아산 주둔 청국군이 바다에 빠진 조선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여 구휼미까지 제공했다거나, 내포 일대 지방관과 주민들이 성환 전투에서 사망한 청일 양국 전사자들을 모두 예장했다거나, 북접 농민군 지휘부가 청국 패잔병들을 불쌍히 여겨 받아줬다는 식의 이야기들이다(625-628쪽). 저자는 이를 ‘유원지의(柔遠之義)’·‘내자불거(來者不拒)’의 인도주의 정신(632쪽), 또는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이자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이라고 상찬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다(633쪽).

참혹한 ‘전장’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는 이미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다뤄온 고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끝맺음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단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책의 주제가 ‘휴머니즘’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영호는 이 책 서평에서 “전쟁의 무자비한 폭력과 힘없는 휴머니즘의 비대칭성”을 지적했지만,<sup>4</sup> 그에 앞서 서술 분량의 극단적인 비대칭,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휴머니즘’이 사실상 제대로 논구된 바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제3부에서는 이제 무대를 평양으로 옮겨 반성 없이 반복되는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그런데 전쟁 폭력의 반복은 그를 고발하는 방식 또한 반복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제3부의 서술방식은 대체로 제2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조선인이 남긴 사료들, 즉 청일전쟁 당시 서영군사마로 재직 한 최문식의 『서경패사초략』이나 평양 지역 관리였던 김영식의 『사정일기』 등은 ‘조선인들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청국병사들의 노략질, 그로 인한 총체적 피란 상황, 그리고 강제 징발로 인한 피해를 생생하게 고발한다(415-421쪽). 한편 평양전투 시 일본군의 행위는 서양인 목격자로 하여금 “전투라기보다는 대량학살”이라고 토로하게 만들었다(492쪽). 일본군은 포로로 잡힌 청국인이나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저항’이나 ‘도망’을 이유로 참살했다(566-570쪽). 이미 경복궁 점령 당시부터 확인되는 참살 사례는 평양전투 이후로는 동학농민군 토벌, ‘치안 방해’ 등을 이유로 조선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일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572-576쪽). 저자는 일본인 인부들까지 조선인 인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들을 폭로했다(615쪽). 그리고 청일전쟁이 ‘질병과의 전쟁’이기도 했다는 지적은 ‘전장’의 참상을 한층 두텁게 만들어준다(485쪽).

제3부가 제2부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전장’이 일본군의 북진과 함께 징발 조선인 인부를 매개로 한반도에서 중국대륙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제3부 제4장). 한반도 ‘전장’에서 반성이 없었던 일본군은 뤼순에서 대학살

4 이영호(2024),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조재근, 푸른역사, 2024),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pp. 333-334.

을 자행했다. 저자가 보기에 이것은 “평양에서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다(579쪽). 전시국제법에 반하는 포로 처형 또한 반복되고 있었는데, 저자는 일본군의 범죄 행위 대다수가 은폐되고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582-583쪽).

이처럼 “집단적 대규모 참살과 극단적 국가주의로 점철된 반성 없는 역사”는 청일전쟁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624쪽). 저자는 전술한 3부작 시리즈 중 러일전쟁을 다룬 세 번째 권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러일전쟁과 한국사회』(일조각, 2017)를 가장 먼저 저술했는데,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이 책에서 완성되었으며,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은 그것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제1부 제4장 제3절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직접 비교 검토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연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217쪽), 저자에게 이 ‘연쇄’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중일전쟁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으며(624쪽), 아마도 아시아태평양전쟁 또한 그 ‘연쇄’의 한 고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덧붙여 제3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조선정부의 갑오개혁 실시로 중앙 권력의 교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방 관리의 교체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본군 점령지역에서는 신임 관리가 부임하여 일본군에 협조적인 체제가 만들어졌으나, 청국군 점령지역에서는 전임 관리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청국군에 협조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440-446쪽). 이로써 한반도는 사실상 분단에 가까운 공간 분할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서흥부사 홍종연은 그 와중에 신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일본군에 의해 ‘완고한 지나당’으로 지목되어 구금까지 당한 사례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가 경복궁 점령사건 이후 조선이 자주국임을 성토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의회 설립을 주장한 바 있음을 들어 ‘개명관료’로 복권시켜 놓았다(436-440쪽). 이는 또다시 홍종우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 3. '전쟁 아닌 전쟁'

요컨대 청일전쟁은 조선인들에게 '남의 나라' 전쟁이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장'이 된 한반도에서는 그것을 '남의 나라' 전쟁으로 취급할 수는 없었다. 한반도가 '전장'이던 시기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청일전쟁을 진정 '남의 나라' 전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전장' 밖에 있었던 청과 일본일 것이다. '전장'에서 전해온 승전 혹은 패전의 소식들은 국민들을 열광케 하거나 실망에 빠지게 만들었겠지만, 전쟁은 어디까지나 국경 너머 저편의 일이었다. 유럽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당시 전화를 피할 수 있었던 일본인들은 스스로 교전 상태에 있다는 의식 자체가 매우 희박했었다는 아마무로 신이치의 지적은 그 사실을 방증해 준다.<sup>5</sup>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남의 나라' 전쟁 취급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태도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전장'에 주목할 것을, 그로부터 전쟁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자고 주장한 이 책은 매우 소중한다. '전장'에 대한 추체힘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로 이끌 것이며, 어찌면 이러한 태도야말로 전쟁이 만연한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일전쟁을 주체적인 시선으로 보고자 한 이 책의 시도는 여전히 청일 간 전쟁이라는 틀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려 한 저자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청일전쟁의 기존 서사를 보충 또는 일부 수정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시선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21쪽). 결과적으로 두 개의 시선 모두 독자를 '전장'에 세워두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행위자의 것

— [www.kci.go.kr](http://www.kci.go.kr)

5 山室信一(2011), 『複合戦争と總力戦の斷層』, 人文書院, pp. 7-9.

이 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 책과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명과 야만’의 틀에 묶여 있는 청일전쟁에 대해 ‘문명’과 ‘야만’ 중 어느 쪽이 었는가를 묻고 그 결과로서 왜곡과 날조를 확인하기보다는, ‘문명’을 자처한 이들이 어떻게 ‘야만’적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문명’의 군대가 ‘야만’의 군대가 되는 경계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후지무라 미치오는 일찍이 청일전쟁을 세 개의 차원, 즉 첫째 청일 간의 전쟁, 둘째 열강과 일본 간의 전쟁, 셋째 일본과 민중 간의 전쟁으로 구분했다. 마지막 셋째는 국제법상 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쟁을 가리키는데, 이를 후지무라는 ‘전쟁 아닌 전쟁’이라고 불렀다.<sup>6</sup> 청일전쟁 종결 후 타이완에서 일본군과 저항세력 간의 비공식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후쿠자와 유키치는 저항세력을 ‘적국의 장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적(叛賊)’이라 규정하고, 또 전시국제법상의 포로가 아니라 일본인 반란자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sup> 전쟁은 독립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전쟁이라 할 경우 전시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뒤따랐다. 바꾸어 말하면 전쟁이 아닐 경우 전시국제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후쿠자와가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전쟁 아닌 전쟁’으로의 규정이었다. 실제로 저항세력의 전멸을 기하고자 1898년 11월에 공포된 「비도형벌령」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다수의 결집 행위에 대해 주모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범법 및 미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심지어는 비도에 협력하거나 그들을 은닉한 경우에도 사형 또는 유·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sup>8</sup> 이 전쟁에는 ‘문명’으로 날조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그것은 아예 ‘문

6 藤村道生(1973), 『日清戰爭: 東アジア近代史の轉換點』, 岩波書店, pp. iv-v.

7 小熊英二(1998),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p. 130.

8 박준형(2009),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각지에서의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 『한국문화』 47, pp. 248-249.

명' 밖에 있었다.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간의 전쟁 또한 '전쟁 아닌 전쟁'이었다. 후지무라는 청일전쟁 당시 이러한 '전쟁 아닌 전쟁'에서 일본군 사상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한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지역별 일본군 사상자 내역을 밝힌 통계자료에서 동학농민군이나 타이완 저항세력과의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가 제외된 것은(481쪽) 그들 또한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까닭일지 모른다. 1910년 강제병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한반도는 제국 일본 내 '외지'가 되었고, 따라서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은 '전쟁 아닌 전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전쟁을 계속하고자 한 것은 전쟁 행위를 인정받아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 아닌 전쟁'을 전쟁 안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은 '문명'의 경계를 선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청일전쟁사는 물론 독립운동을 재서술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다만 '전쟁 아닌 전쟁'이 딛고 있는 땅 또한 '전장'인 까닭에 방법으로서의 '전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준형(2009),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각지에서의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 『한국문화』 47.
- 이영호(2024),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조재곤, 푸른역사, 2024)」,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 조재곤(2005),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푸른역사.
- 조재곤(2017),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일조각.
- 조재곤(2020),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 고종과 대한제국』, 역사공간.
- 하라 아키라(2015), 김연옥 옮김,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 藤村道生(1973), 『日清戦争: 東アジア近代史の轉換點』, 岩波書店.
- 山室信一(2011), 『複合戦争と總力戦の斷層』, 人文書院.
- 小熊英二(1998),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9 藤村道生(1973), 『日清戦争: 東アジア近代史の轉換點』, 岩波書店, p. v.

